

# 글로벌가치사슬의 두 얼굴

현 해 정  
교수 · 국제학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의 단계가 분화돼 여러 국가에서 생산과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지리적으로 분업화된 생산 구조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다. 애플 본사는 미국에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생산과 운송 전 과정을 기획, 관리하지만 제조단계의 상당 부분은 대만에 본사를 둔 위탁전자제조 업체인 폭스콘(Foxconn)의 공장이 위치한 중국 선전에서 이뤄지며, 정저우 지역에서는 조립, 테스트, 포장 등의 공정이 진행된다. 카메라, 저장장치 등은 일본에서, 메모리 반도체, OLED,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은 한국에서 조달된다.

그동안 GVC는 생산단계별로 지역별 비교우위에 기반한 국가 간 분업 및 교역을 통해 비용 절감과 기술 고도화,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인한 무역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또 특정 단계의 재화나 서비스에 비교우위를 지닌 국가에서 생산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국가 간 교역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체 교역량 증가를 견인해 왔다. GVC는 특히 아시아 역내 무역을 촉진하며 크게 성장해 왔는데, 그것은 미주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 기술력, 시장 성장잠재력 등 아시아의 지리적 이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공급 및 수요 충격이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해 발생하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GVC는 국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오히려 위기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중된 공급망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3월 코로나 제로를 위한 중국 선전의 봉쇄 조치로 폭스콘의 공단에서는 아이폰 생산이 수일간 중단됐으며, 상하이 봉쇄로 맥북 생산도 중단됐다. 비단 애플뿐 아니라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테슬라, 소니, BMW 등도 부품생산과 운송



GVC(글로벌가치사슬)는 기업이윤 증대와 기술 발전을 통한 번영이라는 얼굴을 잃지 않으면서 또 다른 얼굴인 위기의 글로벌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큰 숙제로 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등에 큰 차질을 빚으며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단기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폭스콘 공장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돼 아이폰 생산이 감소하면 애플사 실적도 떨어지게 되고 부품 주문량도 줄어들게 돼 애플뿐 아니라 아이폰 생산에 참여하는 전 세계 200여 개 협력업체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아이폰의 특정 부품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애플에 의존하고 다른 고객사와 신규 계약을 쉽게 맺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자칫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최종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 공급 충격은 아이폰 대가수요 적체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GVC에는 전 세계 생산과 소비의 그물망을 타고 한 지역의 위기를 다른 지역과 국가로 빠르게 전달, 확산, 증폭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내재해 있는 것이다.

GVC의 이러한 본질적 취약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세계 주요국들은 불확실성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 차원의 전략 수정과

함께 에너지와 핵심 자원 확보 등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GVC에 내재한 리스크에 대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최근 중국의 봉쇄 조치에 대한 애플과 폭스콘의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애플은 기존 생산기지인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으며 폭스콘은 무려 11조 원을 투자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다른 생산기지를 세우기로 했다. 중국에 집중된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다각화 전략이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과 무역은 투자의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각화 전략을 무한정 구사할 수는 없는 데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다각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업체, 제조업체, 고객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 현지 상황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물론 일차적으로 GVC는 민간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

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주요 수출품 생산을 위한 핵심 자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 주요 광물에 투자해 자원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7년 이후, 공기업의 누적 부채 해결을 위해 구리, 리튬 등 핵심 광물 광산들을 헐값에 매각했다. 이에 더해, 작년 국회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 해외 자원 투자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해 국가가 스스로 핵심 전략 자원의 해외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를 키운 셈이다. 해외 자원 개발은 그 규모와 리스크로 인해 민간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 채널을 복구하고 공기업 해외 투자를 재할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GVC의 불안정성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경제협

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위기 시에 강화되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 및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자금도 증가로 인한 GVC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GVC는 사실 2000년대에 급증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에 힘입은 바가 크다. 현재 가입을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협력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서 디지털, 공급망, 환경, 기술표준 등 신통상 규범 정립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단계의 분업화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무역과 투자 확대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GVC는 기업이윤 증대와 기술 발전, 소비자 후생 증대를 통한 번영이라는 얼굴을 잃지 않으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또 다른 얼굴인 위기의 글로벌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게 됐다.